

“전력 자급률 높은 전남에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정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추진
도매가격 3분할 시행 전남에 불리
'전력 다생산지역 요금 인하' 역행
“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 기회로”

정부가 추진중인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전력 자급률을 반영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력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도 저렴한 전남지역 등에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확대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1일 전문가 전략 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전남

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전남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와 이순형 동산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등 3개 권역 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단순히 수도

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통째로 적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전남지역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한계가 발생한다. 발전소가 없는 비수도권 지역과 전기요금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당초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순형 동산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시·도를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희 전남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차등 전기요금제안을 보면 발전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발전사가 유출돼 지역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미금 녹색에너지연구원 팀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은 저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높으므로 전남의 도매요금을 수도권 대비 하향 설정하

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면서 전남지역의 도소매 전기요금 하락과 기업 유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구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투입 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이런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력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여려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고흥,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규제특례 지정

국토부, 항공센터·고흥만 확정
실증비행 가능...안전성 등 측정

고흥항공센터와 고흥만 일원이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규제특례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60여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와 논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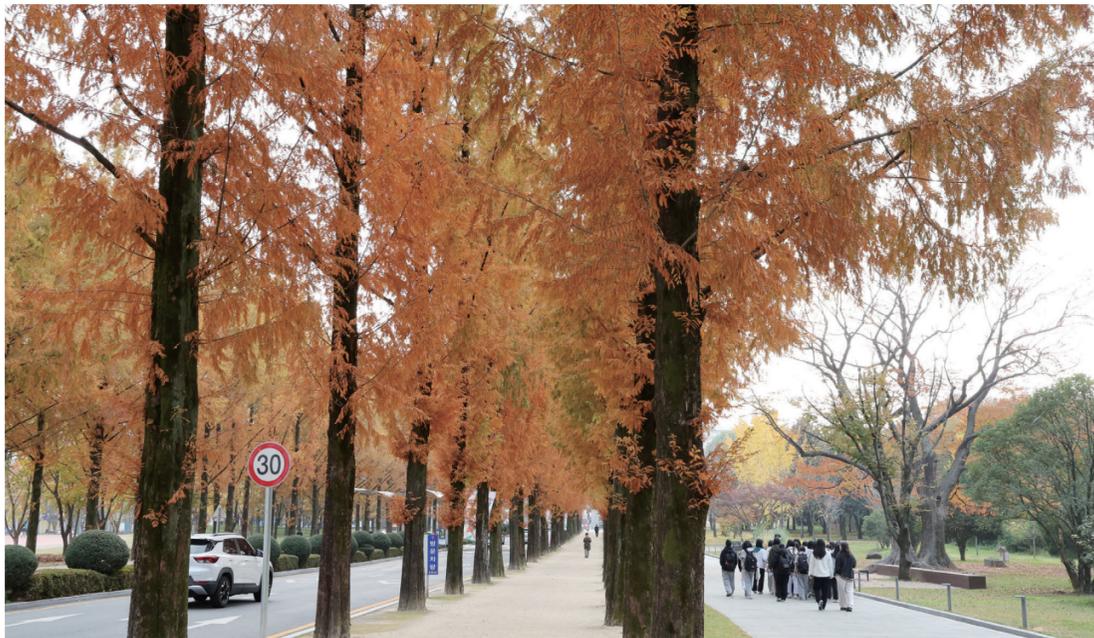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

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체 등록 규제완화와 도심 실증비행 허용, 안전보고 체계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하는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항공기 기준’을 정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도 지정했다.

실증사업구역은 울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우선 지정하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행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돼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대 민주길 투어

전남대학교 민주길 투어에 참가한 전남대사대부고 학생들이 21일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정의의 길인 정문과 박관현 언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5개 국립대와 지역민이 다함께 어울리는 축제 ‘오지다’ 일환으로 열렸다.

김양배 기자

2024 함평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11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함평군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일대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차세대세대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